# ‘번스-톨레프슨법’ 행정명령 가능성 K-조선소, 美 군함건조 길 열리나

### 韓美 조선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

**함정건조 등 협력 논의 본격화**
**내달 규제완화 워킹그룹 회의**
**HD현대 등 국내기업 수혜 전망**

미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번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군함의 블록 제작이나 선체 건조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우리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 측은 자국의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미국 현지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 계획이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 및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 역시 양국 협력의 주요 제약으로 꼽혀왔다.

규제 완화 논의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의회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 통과 가능성이 낮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군함을 함수·중앙부·함미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하거나 빈 선체를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한국 조선사가 블록 모듈(선박의 일부)을 생산·납품하고 미국 조선소가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시설보안등급(FCL)을 취득한 국내 기업이 없어 미국 내 전투함 건조와 MRO 사업 참여는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구난함 등 비전투함은 한국에서 제작 후 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역시 국내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공급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미 군함 수출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인정한 파트너’라는 신뢰 효과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최대 수혜 업체로 HD현대가 꼽힌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했으며, 미포조선의 도크 두 곳을 블록 제작과 특수목적선 건조에 투입하면 연간 생산량을 현재 45척에서 70척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HD현대는 이미 106척의 함정을 인도했으며, 이 중 17%인 18척은 해외로 수출됐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최대 수상함 조선소 운영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지조립 협력의 기반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 전까지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 K-방산기업, 무인기 등 첨단 무기개발 박차

### 미래 전장 주도권 경쟁

**소형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 급부상**
**“골든타임 확보 위해 정부 지원 필요”**

LIG넥스원 ‘MPUH’

현대로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무인 무기체계 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AI), 무인화 기술, 네트워크 중심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장 환경에서는 저비용 소형 드론부터 첨단 고성능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 소형 드론은 정찰과 감시,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정밀 타격이나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첨단 무인기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무인기 시장은 단순 보조 전력을 넘어 핵심 무기체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세계 AI 기반 무인 무기 시장 규모가 2030년 41조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방산기업들도 무인 무기체계 개발과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손잡고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기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는 같은 달 열린 ‘미래 비전 설명회’에서 무인 무기체계·엔진 개발과 양산 시설 구축에 2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LIG넥스원은 AI 기반 자율운항 분야에서 미국 쉴드AI(Shield AI), 안두릴(Anduril)과 협력을 이어가며 기술개발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LIG는 쉴드AI와는 유무인복합·자율작전 시스템 등 미래전장에 최적화된 핵심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안두릴과는 유도무기·무인잠수정과 AI 운영 시스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두릴의 무인체계 플랫폼에 LIG넥스원의 센서와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를 공개했다. 현대는 육군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HR-셰르파를 최초 납품한 이후, 현재 4세대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무인 운용이 가능한 HR-셰르파는 부상병·탄약 이송, 감시정찰, 화생방·지뢰 탐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으로 민수 분야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인 무기체계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확실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해외 기술 강국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인체계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들어선 분야로, 드론이나 사족보행 로봇을 넘어 더 고도화된 자율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미 투자하며 기술 성숙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컷 오프 기준 마련”

**소비쿠폰·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논의**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삼성노조, 주요 경영진에 성과급 개선 요구

**성과급 제도 개정 정식 요청**
**삼성전자측 별도 입장 없어**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DS부문장,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등 회사 경영진에게 성과급 제도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공문을 통해 “최근 SK하이닉스가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지급’을 확정한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재원을 외부 공표 지표인 ‘영업이익’에 따라 산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내부 활용 목적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근거해 마련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EVA 기준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0’이 될 수 있으며, 상한선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성과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후 발표나 성과는 전혀 없다”며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을 넘어, 허탈함과 냉소뿐”이라고 전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못해 이미 바닥에 와 있다”며 “회사는 늦었더라도 최소한 변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